

청년의 출산·양육정책에 대한 선호와 영향요인

배한진(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조주희(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서론

- 청년기는 성인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로(Arnett, 2007), 청년의 특성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Duvall, 1977). 청년의 특성에 따른 출산·양육정책 선호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선행연구들은 주로 미혼남녀의 출산 정책 선호를 분석하였음. 장진경(2005)의 연구에서 미혼남녀들은 자녀 교육비 지원 및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77.9%),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55.3%), 주거지원 강화(40.7%)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유진(2017)의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의 저출산정책 선호가 양육비 지원(32.2%), 결혼비용지원(31.8%), 일가정양립지원(18.9%), 보육서비스지원(17.1%) 순으로 나타남
- 문정희, 김성순(2017)의 연구는 생애 단계(결혼 전, 기혼 무자녀, 기혼 1자녀)를 고려하여 부산시 청년의 출산정책선호를 분석함. 분석 결과 미혼은 안정적인 일자리(40.5%), 자녀 양육 비용 지원(19.0%), 일과 양육 병행 지원(12.3%), 기혼 무자녀는 자녀 양육 비용 지원(23.3%),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21.7%). 자녀 돌봄 지원(18.3%), 기혼 1자녀는 자녀 돌봄 지원(25.7%), 자녀 양육 비용 지원(24.0%),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15.0%) 순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청년의 생애 단계 및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청년의 출산·양육정책 선호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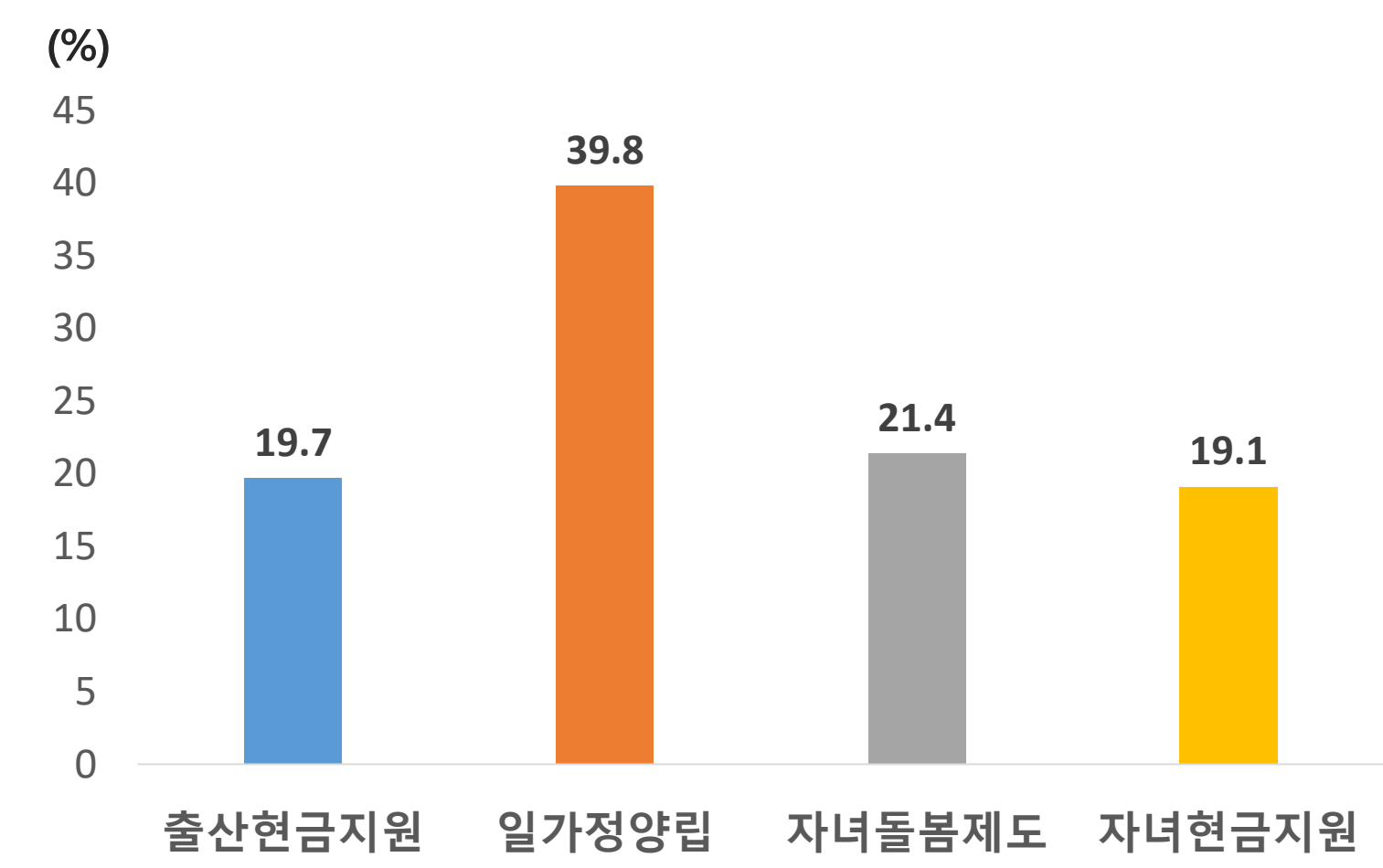
연구 결과

● 연구 대상의 특성

<표 1> 연구 대상의 특성 n=1,957		
특성	빈도/비율	비율(가중치 부여)
생애 단계	미혼	1625(83.0)
	기혼 무자녀	125(6.4)
	기혼 1자녀	121(6.2)
	기혼 2자녀 이상	86(4.4)
출산 의향	출산 의향 없음	714(36.5)
	출산 의향 있음	1243(63.5)
성별	남성	1023(52.3)
	여성	934(47.7)
연령대	만 18~19세	172(8.8)
	만 20~24세	566(28.9)
	만 25~29세	639(32.7)
	만 30~34세	580(29.6)
	만 35~39세	100(5.1)
본인 교육수준	고졸이하	941(48.1)
	전문대	331(16.9)
	대학 재학 이상	685(35.0)
부 교육수준	고졸 이하	1,138(58.2)
	전문대졸	238(12.2)
	대졸 이상	581(29.7)
취업 여부	미취업	675(34.5)
	취업	1282(65.5)
부채 유무	부채 없음	1,602(81.9)
	부채 있음	355(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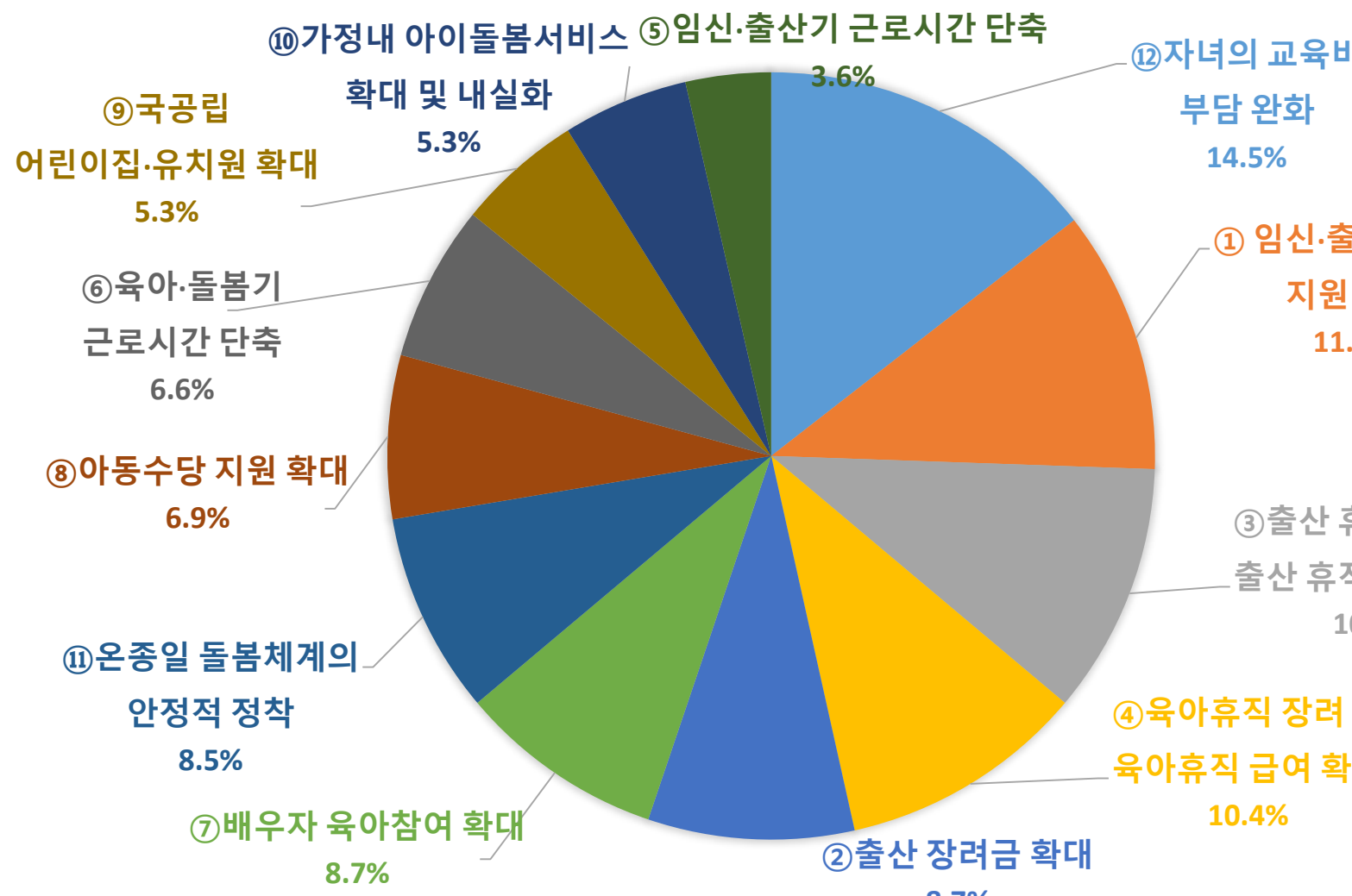
- 본 연구는 만 18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연구 대상의 81.0%가 미혼이었으며, 기혼 무자녀 7.5%, 기혼 1자녀 6.8%, 기혼 2자녀 이상 4.7%로 나타남
-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3.5%로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36.5%)보다 높았음
-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48.0%)가 가장 많았고 대학 재학 이상(35.6%), 전문대 재학 및 졸업자(16.4%)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66.1%)가 미취업자(33.9%)보다 많았고, 부채가 있는 경우는 18.7%로 낮은 비율을 보임

● 청년의 출산·양육정책 선호 분포



<그림 1> 만 18세~34세 청년의 출산·양육정책 선호 1순위 응답 비율

- 만 18세~34세 청년들은 일·가정양립정책을 선호하는 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고, 자녀돌봄 지원제도(21.4%), 출산 관련 현금지원(19.7%), 자녀돌봄 현금지원(19.1%)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만 18세~34세 청년의 출산·양육정책 선호 1순위 응답 비율

- 세부 정책별로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선호하는 경우가 14.5%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11.1%),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직 급여 보장(10.6%), 육아휴직 장려 및 육아휴직 급여 확대(10.4%) 등의 순으로 선호가 나타남

연구 방법

- 연구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2021년 자료
- 분석 대상: 전국 만 18세~만 34세 청년 남녀 2,041명 중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1,957명
- 주요 변수
 - 출산·양육정책 선호: “귀하는 다음의 출산·양육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여 1~3순위 응답 중 1순위 정책을 다음 4개 유형으로 재분류(‘기타’는 제외)
 - ①출산 관련 현금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출산 장려금 확대, ②일·가정양립정책: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직 급여 보장, 육아휴직 장려 및 육아휴직 급여 확대,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돌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육아참여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확산), ③자녀돌봄 지원제도: 아동수당 지원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④자녀돌봄 현금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가정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온종일 돌봄체계의 안정적 정착)
 - 생애 단계(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1자녀, 기혼 2자녀), 출산 의향(0=출산 의향 없음, 1=출산 의향 있음), 성별(0=남성, 1=여성), 연령(만 18~19세, 만 20~24세, 만 25~29세, 만 30~34세), 본인 교육수준(고졸 이하, 전문대, 대학 재학 이상), 부 교육수준(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취업여부(0=미취업, 1=취업), 부채 유무(0=부채 없음, 1=부채 있음)
- 분석 방법: ① 교차분석을 통해 청년의 특성별 정책 선호의 차이 분석, ②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책 선호의 차이 분석

● 교차분석 결과

<표 2> 만 18세~34세 청년의 특성별 출산·양육정책 선호에 대한 교차분석 n=1,957						
특성	출산 관련 현금지원	일·가정 양립정책	자녀돌봄 지원제도	자녀돌봄 현금지원	전체	chi²
생애 단계	미혼	19.8	41.3	20.5	18.4	24.9*
	기혼 무자녀	24.2	34.7	22.3	18.9	
	기혼 1자녀	19.6	36.9	19.9	23.6	
출산 의향	없음	16.6	38.9	23.5	21.0	10.4*
	있음	21.5	40.3	20.1	18.0	
성별	남성	23.8	37.7	21.3	17.2	25.0*
	여성	15.2	42.1	21.4	21.3	
연령	만 18~19세	22.5	39.1	22.3	16.1	11.2
	만 20~24세	23.1	39.3	20.6	17.0	
	만 25~29세	16.7	41.1	21.4	20.9	
	만 30~34세	19.1	39.0	21.8	20.1	
본인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2.4	36.6	21.3	19.9	30.3***
	전문대	12.2	42.7	28.7	16.4	
	대학 재학 이상	19.7	42.9	18.1	19.3	
부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9.9	38.7	22.9	18.5	13.8
	전문대졸	19.7	48.5	16.6	15.2	
	대졸 이상	19.4	38.3	20.3	22.0	
취업 여부	미취업	19.9	38.7	20.8	20.6	10.4*
	취업	19.7	40.3	21.6	18.4	
부채 유무	없음	19.6	40.1	21.4	18.9	0.47
	있음	20.2	38.4	21.3	20.0	

* $p<.05$, ** $p<.01$, *** $p<.001$

- 교차분석 결과, 생애 단계($\chi^2(9)=24.9^*$), 출산 의향($\chi^2(3)=10.4^*$), 성별($\chi^2(3)=25.0^*$), 본인 교육수준($\chi^2(6)=30.3^*$), 취업 여부($\chi^2(3)=10.4^*$)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의 차이가 존재
- **미혼은 일·가정양립정책(41.3%), 기혼 2자녀 이상은 자녀돌봄 지원제도(36.3%)를 가장 선호함. 기혼 무자녀는 상대적으로 출산 관련 현금지원 선호 비율이 높았음(24.2%)**
-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일·가정양립정책(40.3%), 출산 관련 현금지원(21.5%),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 자녀돌봄 지원제도(23.5%), 자녀돌봄 현금지원(21.0%) 선호 비율이 높았음
- **남성은 출산 관련 현금지원 선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23.8%), 여성은 1. 일·가정양립정책(42.1%), 2. 자녀돌봄 현금지원(21.3%)의 선호 비율이 높았음**
- 본인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이거나 대학 이상일 때 일·가정양립정책을 선호하는 비율이 각각 42.7%, 42.9%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전문대 집단은 자녀돌봄 현금지원(16.4%)보다 자녀돌봄 지원제도(28.7%)의 선호 비율이 높았음
-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일·가정양립정책을 선호하는 비율(40.3%)이 약간 높고, 자녀돌봄 현금지원 선호 비율은 약간 낮았음(18.4%)

●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

<표 3> 만 18세~34세 청년의 출산·양육정책 선호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분석 n=1,957			
정책 선호 1순위 (기준=일·가정양립정책)	출산 관련 현금지원	자녀돌봄 지원제도	자녀돌봄 현금지원
	B (SE)	B (SE)	B (SE)
생애 단계(0=미혼)			
기혼 무자녀	0.57(0.29)*	0.39(0.28)	0.22(0.30)
기혼 1자녀	0.42(0.31)	0.18(0.29)	0.31(0.30)
기혼 2자녀 이상	0.36(0.45)	1.11(0.34)*	0.67(0.36)
출산의향(0=없음)			
출산의향 있음	0.16(0.15)	-0.09(0.15)	-0.08(0.15)
성별(0=남성)			
여성	-0.52(0.15)***	-0.21(0.14)	0.12(0.14)
연령집단(0=만18~19세)			
만20~24세	0.05(0.26)	-0.10(0.27)	0.21(0.28)
만25~29세	-0.33(0.30)	-0.10(0.30)	0.57(0.30)
만30~34세	-0.28(0.32)	-0.24(0.33)	0.50(0.32)
본인 교육수준(0=고졸 이하) ^{a)}			
전문대	-0.60(0.23)**	0.15(0.20)	-0.54(0.22)*
대학 재학 이상	-0.18(0.19)	-0.32(0.18)	-0.45(0.19)*
부 교육수준(0=고졸 이하)			
전문대졸	-0.22(0.22)	-0.48(0.22)*	-0.31(0.24)
대졸 이상	-0.01(0.16)	0.04(0.16)	0.31(0.16)
취업여부	0.12(0.17)	0.10(0.16)	-0.12(0.16)
부채유무	0.05(0.19)	0.01(0.18)	0.06(0.18)
상수	-0.40(0.26)	-0.37(0.28)	-0.96(0.29)**

* $p<.05$, ** $p<.01$, *** $p<.001$

a) 전문대 및 대학 재학 이상의 경우 재학/휴학을 포함

-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 생애 단계, 성별, 본인 교육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 유형의 차이가 발견됨
- **미혼에 비해 기혼 무자녀 집단은 일·가정양립정책보다 출산 관련 현금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beta=0.57$, $p<.05$). 미혼에 비해 기혼 2자녀 이상 집단은 일·가정양립정책보다 자녀돌봄 지원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beta=1.11$, $p<.05$)**
- 여성은 일·가정양립정책에 비해 출산 관련 현금지원을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beta=-0.52$, $p<.001$).
- 즉, **남성은 출산 관련 현금지원, 여성은 일·가정양립정책을 더 선호**
- 본인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일 경우 출산 관련 현금지원 ($\beta=-0.60$, $p<.01$), 자녀돌봄 현금지원 ($\beta=-0.54$, $p<.05$)보다 일·가정양립정책을, 대학 이상일 경우 자녀돌봄 현금지원 ($\beta=-0.45$, $p<.05$)보다 일·가정양립정책을 더 선호

결론 및 논의

- 본 연구는 청년들의 가족 형성 및 확대 과정에서 출산·양육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구체적으로 미혼 청년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을 우려하여 일·가정양립정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2자녀 이상을 출산한 청년은 자녀돌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현금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 및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청년들이 결혼 및 출산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며, 출산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 본 연구는 전국 만 18세~34세 청년을 대표하는 표본을 활용하여 생애 단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출산·양육정책 선호를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미혼 청년들은 일·가정양립정책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정책 범주 구성의 차이(본 연구에서는 결혼 비용 미포함)에 의한 것인지 시간의 흐름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선호 변화인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